남부내륙철도 성주역사 건립 촉구 결의안
(배재만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19년 2월 일
발 의 자 : 배재만, 김영래, 김경호
김성우, 도희재, 전수곤,
황숙희

1. 제안이유

○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가운데 2016년 7월, 성주군 성주읍 성산포대 일원에 사드 배치가 결정 되었고 오랜 혼란과 갈등속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위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원에 사드가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정부는 성주군민의 희생과 고통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우리군이 건의한 1조 9천억원 규모, 17개 사업에 대해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나 현재 정부지원사업은 답보상태에 있음.

2. 주요내용

○ 중앙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군민들은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으며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은 물론 불만과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르고 있음.

○ 성주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책임있는 자세로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함. 또한, 대구~성주 경전철 사업 등 대규모 SOC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추진하고 정부지원사업이 조속히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함.

3. 결의내용 : 별 첨

남부내륙고속철도 성주역사 건립 촉구 결의안

지난달 29일 김천~진주~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 되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수도권과 경북·경남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연장 172km, 4조 7,000억원의 대규모 철도사업이며,

그동안 경제성 저조의 이유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가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인해 사업의 청신호가 켜지며 경북과 경남의 주민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정부의 방침은 분명 환영받아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자료에 따르면 남부내륙철도의 역사는 6개소로 기존 역사인 김천역(경부선), 진주역(경전선)을 제외한 신설 역사 4개소(합천역, 고성역, 통영역, 거제역)의 후보지 중 경북지역은 역사건립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천시~합천역 구간은 65km로 고성~통영(14.8km), 통영~거제(12.8km)보다 2배 이상 긴 노선이지만 김천역 분기로부터 약25km지점인 성주에는 기차역이 아닌 철도 운영 신호체계인 신호장만이 설치 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 사업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할 것이다.

성주군은 지난 2016년 북한의 무력 도발억제와 국가안보를 위해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THAAD) 배치가 결정되어 예기치 않는 혼란과 군민간 첨예한 갈등으로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오랜 진통 끝에 국민안위라는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따라 2017년 성주 초전면에 사드가 배치되고 성주 군민들은 아직까지 아픔을 삭이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때 성주군에 반대급부인 역사건립 없이 철도 노선만 지나간다면 지역은 2개로 나눠지고 성주 서부권의 빼어난 자연환경은 파괴될 것이며, 소음 등으로 인해 또다시 지역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성주의 서부권에는 가야문화를 연계한 가야산국립공원 관광거점화 사업, 성주호 종합레저 관광벨트 조성사업, 지역농산물 직거래센터 건립 등 서부권 종합발전계획이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 지역 간 물류 교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 역사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성주군은 사드 배치 당시 정부에서 지역 현안사업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지원책이 없어 군민들의 박탈감은 심화되고 있다. 철도역사의 건립은 사드 배치로 피폐한 성주군민의 민심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배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성주군 의회에서는 5만 성주군민의 염원을 담아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반드시 성주군 역사가 건립되어야함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성주군 역사건립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2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일동